JAPAN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일본의 전자서적 정책현황』

작성취지

- 일본정부는 본격적인 전자서적 도래 및 아마존 등 해외 전자서적의 일본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부터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해왔음.
- 일본정부가 장래의 전자서적 시장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적 방향성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 전자서적 관련정책과 더불어 우리 출판 및 디지털콘텐츠의 일본진출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출처 :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화청 홈페이지의 전자서적 관련 각종보고서 및 '정보미디어백서 2013' 를 토대로 작성

작성순서

- 1. 일본의 전자서적 시장
- 2. 일본정부의 전자서적 관련정책
- 3. 사례: 콘텐츠 긴급전자화 사업

1. 일본의 전자서적 시장

일본의 전자시장 규모

전자시장 규모

- 인프레스 R&D의 전자서적조사보고서(2012년 7월 3일 발행)에 따르면, 2011년도 일본의 전자출판시장은 651억 엔을 기록했음. 출판시장전체의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2002년도의 10억 엔에서 2011년도에는 651억 엔으로 크게 성장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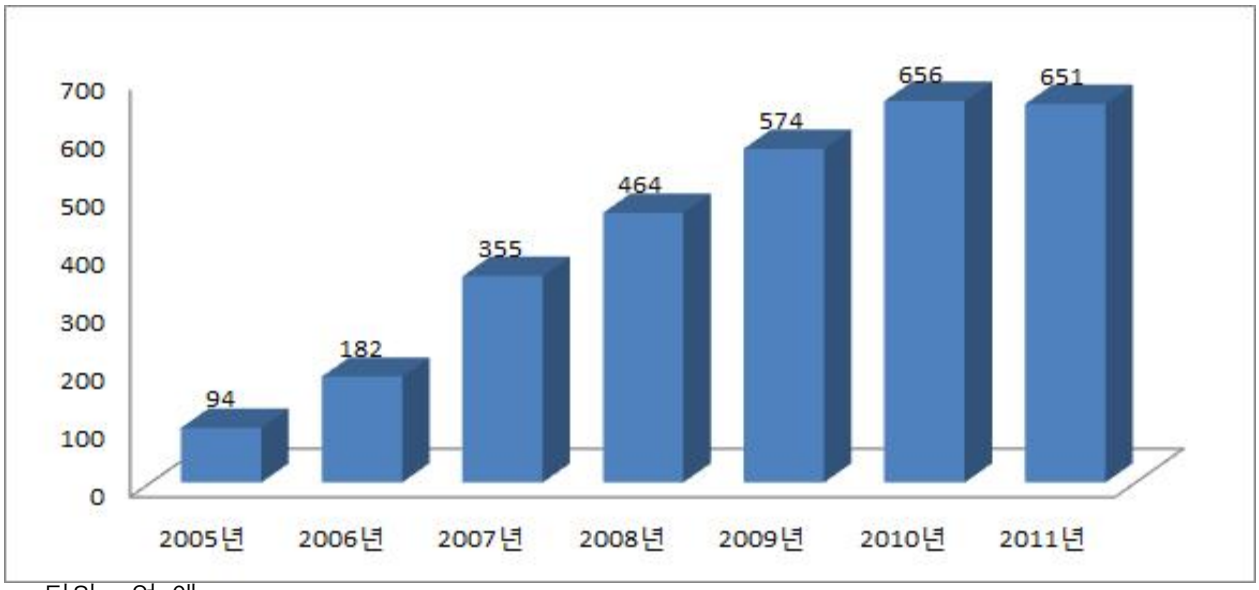
※전자출판시장이란 PC용, 휴대전화용, 뉴플랫폼용, 전자잡지 등을 합산한 수치를 말함.

- 2010년도의 656억 엔보다 약 5억 엔 줄어든 651억 엔을 기록했음.
- 이 가운데 2011년도 전자서적시장은 629억 엔을 기록했음. 이는

2010년도의 650억 엔보다 약 21억 엔이 감소(3.2%)한 수치임.

- 2011년도 전자서적시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용이 37억 엔, 휴대전화용 480억 엔, 뉴플랫폼용 112억 엔을 기록했음. 전반적으로 뉴 플랫폼시장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2010년도 24억 엔에서 2011년도 112억 엔으로 약 3.6배 증가), 휴대전화(572억 엔에서 480억 엔으로) 및 PC용(53억 엔에서 37억 엔)은 전년보다 감소했음.
- 휴대전화용 전자서적시장은 전제 전자서적시장의 76%를 차지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 시장규모가 2010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피처폰 유저의 감소와 더불어 광고 감소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임.
- 휴대전화용 전자서적시장은 약 80%가 코믹으로 매출 대부분이 코믹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머지는 문예계 전자서적이 9%, 전자사진집이 9%로 구성되어 있음(2010년 통계).
- PC용 전자서적시장은 대형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단말로 열람가능한 멀티디바이스화가 진행되어 뉴플랫폼용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로 인해 협의의 PC용 시장은 큰 폭의 축소를 보임.
- 뉴플랫폼용 전자서적시장은 112억 엔으로 추정되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 유저의 증가에 따른 확대 및 PC용 시장의 멀티디바이스화 등의 영향으로 2010년도의 24억 엔에서 3.6배 증가한 112억 엔으로 급성장.
- 일본의 전자서적시장은 10억 엔 정도였던 2002년경부터 주목을 받아왔음. 그 후 제 3세대 휴대전화의 조기보급과 더불어 휴대데이터통신의 패키지 정액제 도입,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한 소액과금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구축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시장의 중심은 휴대전화용 전자서적시장으로 이행되어 크게 성장해왔음.
- 2010년에 들어와서는 플랫폼도 PC/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 태블릿단말, 전용전자북리더로 다양화되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음. 또한 2012년에는 해외업체도 전자서적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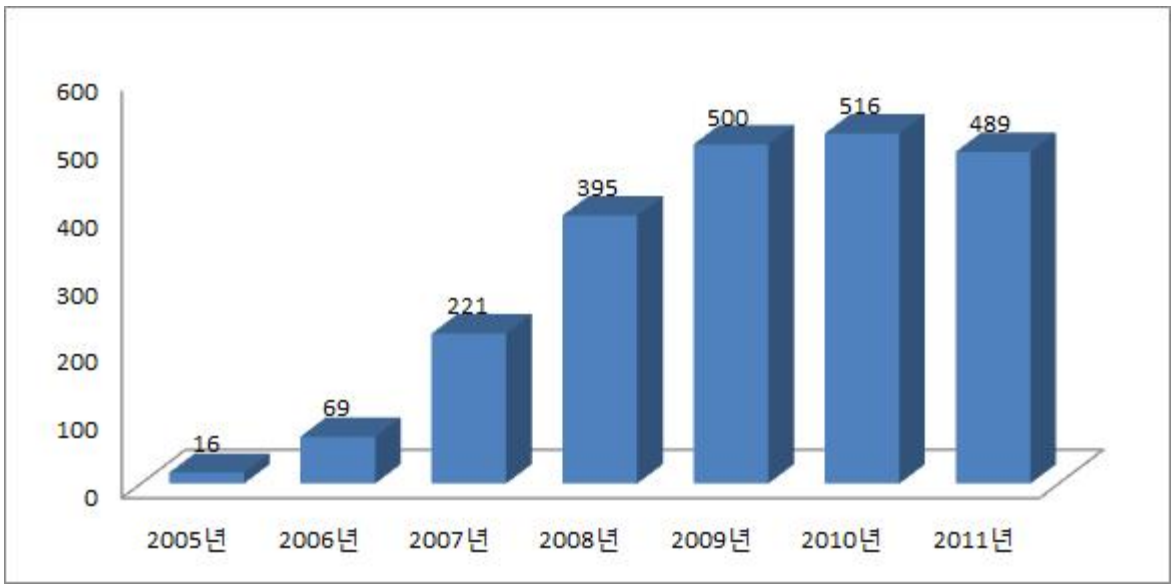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전자출판시장 추이



단위 : 억 엔

출처 : 정보미디어백서 2013

▌그림 2▌ 일본의 모바일 전자출판시장 추이



단위 : 억 엔

출처 : 정보미디어백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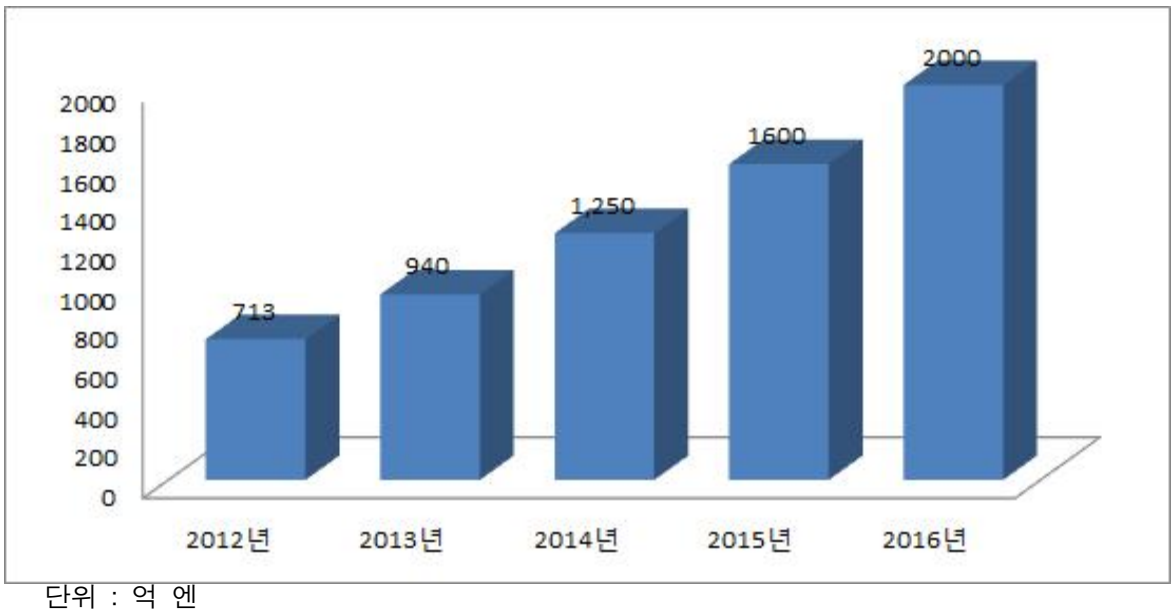
전자서적시장 동향

- 전자출판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편으로 서적의 출판시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서적의 유통과정은 저자, 출판사, 인쇄업체, 도매업체, 서점을 통해 독자에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에서는 대형 도매업체 2사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 서점을 포함해 어느 서점에 가더라도 다양한 서적과 만날 수 있음.
- 일본출판사 약 4000사 가운데, 일본전자서적출판사협회에 가맹한 회사는 불과 43사에 불과함.
- 2011년 9월 고단샤, 신쵸사, 쇼가쿠칸등 20개 출판사가 단결해 일본의 전자출판비즈니스의 종합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새회사 '출판디지털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

전자시장 전망

- 2012년도 이후 일본의 전자서적시장은 휴대전화용 전자시장의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뉴플랫폼용 전자서적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2016년도에는 2011년도의 약 3.1배 증가한 2,000억 엔의 시장이 될 전망임.
  -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유료콘텐츠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12년도 이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도 미국 아마존사의 킨들 등의 해외사업자 진출 및 라쿠텐 KOBO발매 등을 계기로 향후 2~3년 사이에 콘텐츠 확대 및 환경정비 등이 추진되어 2013년도 이후에 본격적인 확대기에 돌입할 것임.
  - 또한 휴대전화의 공식콘텐츠 이용자의 창구인 라이트 유저용 판매스토어도 2012년에 들어와 호조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2013년도에는 뉴플랫폼용 시장이 휴대전화용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보임.
  - 2016년도에는 전자잡지시장까지 합치면, 전자출판시장은 2,350억 엔이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일본의 전자서적시장 전망



단위 : 억 엔

출처 : 정보미디어백서 2013

○ 전자서적의 이용

- 비디오 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출판을 이용한 경험자는 전체의 7.1%로 나타났음. 성별 구성은 남성이 7.7%, 여성이 6.4%로 남성이 약간 많았음.
  - 이용단말은 가장 많은 것이 데스크탑, 노트PC가 3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이 각각 35.4%, 태블릿 단말이 14.6%, 전자북리더는 2.9% 순으로 나타났음.
  - 전자출판유저의 이용장르는 서적이 스마트폰이 46.5%, 스마트폰이외가 38%임.

2. 일본정부의 전자서적 관련 정책

■ 부처별 전자서적 관련 정책동향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출판물 이·활용의 추진에 관한 간담회

- 출판물의 디지털전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에 대해 해외각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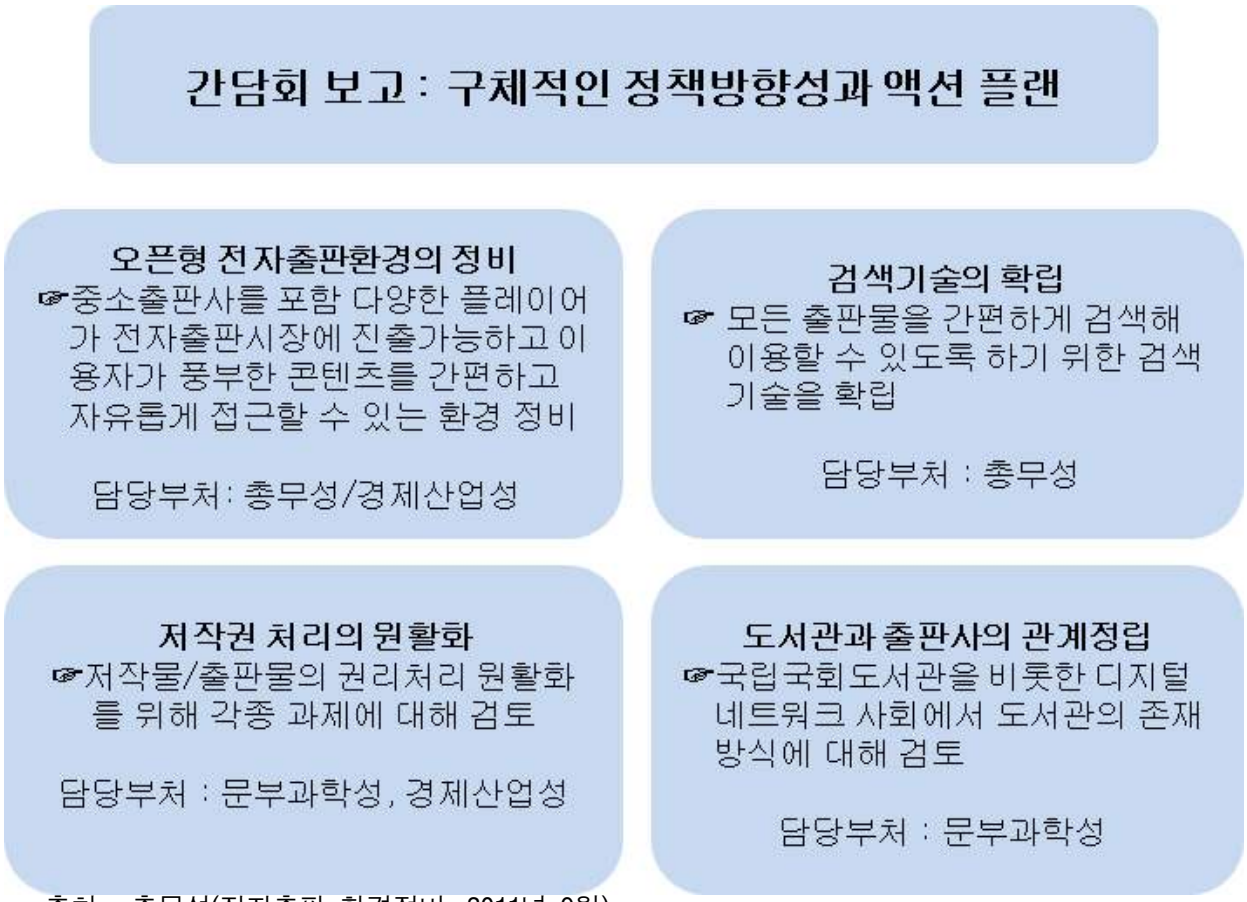
일본간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된 점을 토대로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3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0년 3월부터 '디지털・네크워크 사회에서의 출판물 이활용(利活用) 추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작가, 출판사, 신문사, 인쇄사, 서점, 통신사업자, 메이커 등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6월 전자출판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했음. 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오픈형 전자출판환경의 정비'(주요 담당부처 총무성, 경제산업성), '검색기반의 확립'(총무성), 권리처리의 원활화(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도서관과 출판사의 관계정립'(문부과학성) 등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및 국립국회도서관은 각자 간담회보고서 내용에 입각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관계부처의 역할

- 총무성은 지적 자산의 ALL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로써 공유・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제휴를 목표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전자서적에서는 주로 기술면의 과제해결을 담당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전자서적 파일포맷을 일본어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전자서적 변환포맷의 확립 및 기사단위의 마이크로 콘텐츠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ID의 관리방법의 확립 등을 들 수 있음.
  - 문부과학성에서는 저작물 및 출판물의 원활한 권리처리를 추진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및 출판사에의 저작인접권 등의 부여 필요성 검토 등을 실시
  - 경제산업성에서는 전자서적의 원활한 계약을 위한 실증실험, 전자서적 단말상에서 외자(外字), 이체자(異體字)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림 4▐ 일본정부의 전자서적 정책 방향과 액션 플랜



출처 : 총무성(전자출판 환경정비, 2011년 9월)

총무성의 관련사업

EPUB 일본어 확장사양 마련 프로젝트

- 총무성에서는 전자출판 환경정비사업으로 10개의 회의체에서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EPUB란 구글 및 애플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서적의 파일포맷의 명칭으로 미국의 전자서적 표준화단체인 국제전자출판포럼(IDPF)에 의해 규정된 규격임. EPUB 2.0은 세로쓰기, 루비문자 등 일본어 특유의 조판규칙에 대응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음.
- 따라서 총무성에서는 'EPUB 일본어 확장사양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그 성과가 IDPF에서 인정되어 2011년 10월 최신규격인 'EPUB 3.0'이 채택되었음.
- 이 결과 전세계 브라우저, 전자서적단말에서 일본어 서적을 제공할

수 있게 됨.

ACCESSIBILITY를 고려한 전자출판 서비스의 실현

- 전자서적을 사용함으로써 예를들면 시력이 저하된 사람이 문장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확대할 수 있다면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음성낭독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일본어 문장은 루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몇 개의 읽은 방법이 존재함. 따라서 전자출판 제작단계에서부터 한 가지 뜻의 루비를 데이터로서 부여해두는 것 등을 규정한 '음성낭독대응 전자출판제작 가이드라인' 및 '화상정보로부터 텍스트 추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함.

차세대 전자출판 콘텐츠ID추진 프로젝트

- 기존 잡지는 잡지단위로의 유통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전자출판에서는 기사단위로의 유통이 가능해짐. 다만 출판사가 이러한 마이크로 콘텐츠를 원활하게 유통시켜 독자가 마이크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잡지코드 ISBN으로는 관리가 어려움.
- 따라서 새로 20개의 전자출판유통관리코드 및 운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마이크로콘텐츠에서도 유통상의 권리처리 및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했음.

차세대 잡지정보 공유화를 위한 환경정비

- 이용자가 원하는 출판물을 이용자 자신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검색기반의 실현을 위해서 '종이의 기간(旣刊)/종이의 근간(近刊)/전자의 기간(旣刊)/전자의 근간(近刊) 4가지 서지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유통전의 출판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근간정보센터'가 2011년 4월 설립됨.
- 근간정보센터에는 출판사 194사와 서점 64사가 참가했으며 출판사 및 전자서적 전송업자, 서점 간의 서지정보를 연계할 수 있음. 근간정보에 접근해 사전에 주문을 할 수 있다면 수요예측이 정확해지고

출판유통의 효율성 및 판촉이 기대됨.

○ 전자서적교환 포맷 표준화 프로젝트

- 인쇄데이터 및 전자서적의 데이터를 다양한 전자서적 단말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말에 맞는 파일포맷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
-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는 하나이지만, 복수의 파일포맷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품이 많이 걸림. 이로 인해 중소 출판사로는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있음.
- 그래서 전자출판의 디지털데이터를 모든 단말에 대응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전자서적 교환포맷을 제정하고 공개했음.

문화청의 정책방향 및 사업

○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검토회 보고

- 문화청은 그 동안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검토회의'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의 관계정립', 출판물 권리처리의 원활화, 출판자에의 권리부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해왔음. 2012년 1월 10일 검토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도서관과 공공서비스의 관계 정립

- 국회도서관의 디지털전환 자료의 활용방안 검토는 시급한 과제이며 조기실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 국립도서관은 1968년까지 발행된 도서(약 88만권) 및 잡지 등의 디지털전환이 이미 끝났으며, 합해 약 210만권이 디지털화 되었음.

-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각 가정까지 송신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한 1단계로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를 일정한 범위, 조건 하에

서 공립도서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

- 대상출판물의 범위는 시장에서 입수가 곤란한 출판물 등으로 함.(전자서적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부지않는 범위내)
- 공립도서관 등에서의 열람과 함께 일정한 조건하에 복제 허용
- 국립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상으로 한 검색서비스의 실시에 대해서는 본문검색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검색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자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화 된 자료의 민간사업자 등에의 제공에 대해 국회도서관과 민간사업자 등이 손잡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 환경정비를 위한 관계자간 협의의 장 등을 설치하는 일 및 유료전송서비스의 한정적, 실험적 사업의 추진등도 검토할 필요함.

○ 출판물의 권리처리 원활화에 관한 사항

-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중소출판사 및 전송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비즈니스 전개의 실현과 권리자 불명작품 등의 원활한 권리처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먼저 출판물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있음.

※국회도서관 및 출판사가 보유하는 DB의 활용등

- 권리처리의 창구적인 기능을 구축하는 대책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출판물의 권리처리 관련 창구기능의 집중화, 불명권리자 찾기 및 재정(裁定)절차대항 등의 기능정비등

- 권리처리 관련 분쟁처리에 도움이 되는 대책 등임.

○ 출판사에의 권리부여에 관한 사항

- 출판사에의 권리부여에 대해서는 출판사 등이 중심이 되어 전자서적 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함. 또한 법제면에서 과제 정리 등에 대해서는 문화청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

- 전자서적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을 포함 시급한 검토를 해야 함.

○ eBooks 프로젝트

- 문화청은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실증실험'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를 전자서적으로 해서 전송하는 실험 '문화청 eBook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13작품을 전송할 예정.
- 동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전송은 주식회사 기노구니야 서점이 협력.
- 동 프로젝트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하는 디지털 전환 자료 가운데에서 선정된 자료를 저작권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서적제작에서 전송까지를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로써 과제 및 대책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사업임.
- 또한 실험결과는 앞으로 민간사업자 및 공적 기관 등이 기존의 디지털화된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전자서적화해서 전송하는 경우 참고가 됨.

▌표 1▐ 국회도서관 소장 디지털 자료 활용 프로세스

순서	내용
대상자료의 선정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화된 자료에서 선정
권리처리	대상자료의 저작권을 처리 (사후 50년 경과,권리자 관련 조사, 권리자 연락처, 권리자 허락등)
전자서적의 제작	저작권처리가 끝난 자료를 전자서적화
전자서적의 전송	실제 전자서점을 통해 전송
이용상황 등의 평가	일반 유저의 평가를 검토

○ 총무성의 전자서적 관련 주요 사업성과

- 전자서적교환 포맷의 확립
- EPUB일본어 확장사영 마련 및 'IDPF(국제전자출판포럼)'의 EPUB

3.0 초안에서의 채택

- 서지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간정보센터의 설립
- 메타데이터 정보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메타데이터 정보기반의 구축,
  - 기사, 목차 단위로 대응가능한 전자출판 콘텐츠 유통관리 코드 및 운용가이드라인 책정
  - 음성낭독대응 전자출판제작 가이드라인, 화상정보에서의 텍스트 추출 가이드라인
  - SD카드용 전자서적격납 규격안의 마련 및 표준화단체 ‘SD콘소시움’의 규격 ‘SD-SD eBooK’에의 반영
  - 전자출판물의 유통촉진을 위한 정보공유 클라우드 구축, 출판물 관련정보의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교육기관의 소속레벨에 따른 탄력적 인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의 확립
  - 도서관내 전자출판이활용 가이드라인 책정

경제산업성의 정책방향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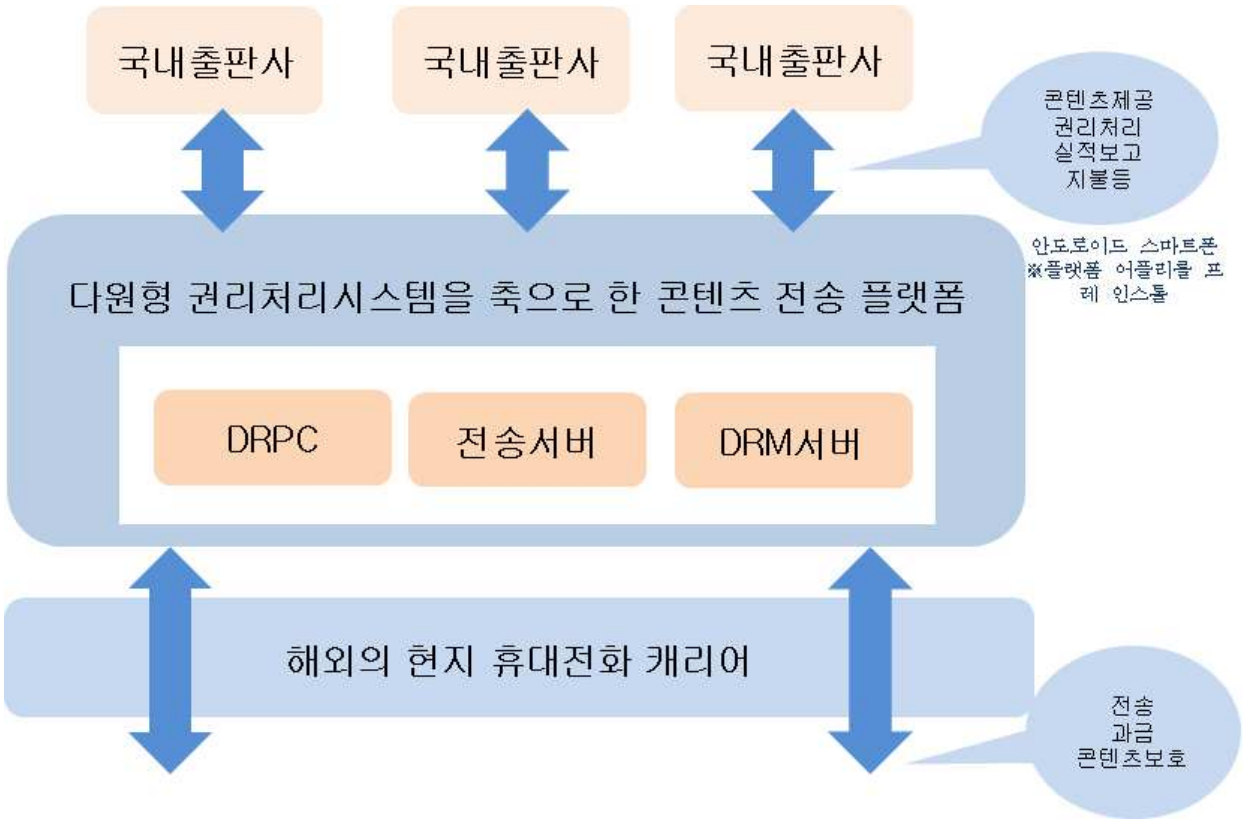
전자출판물의 계약원활화에 관한 실증실험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출판물 이·활용의 추진에 관한 간담회 보고에서 출판물의 권리처리 원활화를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 및 관계자에의 적절한 이익환원을 도모하고
- 개별적인 출판물의 특성에 걸맞은 원활한 계약을 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해야한다고 명시
- 이를 위한 검토 및 실증실험을 실시함.
- 실증실험의 내용은 출판물의 권리자, 이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는 콘텐츠 홀더와 전송사업자, 2차 이용자간의 권리처리시, 권리자 및 콘텐츠 홀더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가장 시장효과를 발휘하기 용이한 이용조건에 관해 영향력을 갖는 시스템의 설계 및 실증을 실시.
- 이와 관련 전자출판물의 원활한 계약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실증실

험을 실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원형 권리처리 시스템(아래 참조)을 전자출판계약절차 및 이용실적관리 등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다만 그대로 실제 전자출판비즈니스의 인프라로 이용할 수 있기까지에는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다원형 권리처리 시스템과 콘텐츠전송 시스템을 연결시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코믹 등을 디지털화해서 전세계로 전송하는 동시에 권리처리 및 이용실적 관리, 과금 등을 처리하고 전자출판 마켓의 창출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그림 5▐ 다원형 권리처리시스템



○ 외자(外字)/이체자(異體字)의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 전술한 간담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출판에서 출판물의 작성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외자 및 이체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

- 일본의 출판물에는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출판물의 작성자의 의도를 전자출판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외자의 수집방법, 정리방법, 문자도형 공유기반의 운영방법, 이용단말에서의 외자 구현방법 등에 대해 '전자출판 일본어포맷 통일규격회의'와 협력하면서 검토
  - 유식자 업계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자/이체자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외자/이체자 이용환경정비에 관한 논점정리 및 과제해결 대책을 검토했음.
  - 연구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별번호 매트릭스를 축으로 한 이용환경의 정비를 제안해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콘센서스가 형성됨. 다만 이런 이용환경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가는 측면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음.
  -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별번호매트릭스에 등록해야할 대상의 문자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떠한 룰에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등록하며 식별번호 매트릭스가 경신된 것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해나갈 것인가등 등록/유지/관리를 끊김없이 실현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등록판단룰은 공평성, 정확성, 영속성을 제대로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의 확립이 중요함.
  - 자형공통기반(식별번호 매트릭스 예시자형폰트, 한자정보 테이블) 부분은 외자/이체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되는 부분으로 사회인프라로서 공익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향후 전문운영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입력툴 및 검색엔진 및 식별번호 및 각문자집합과의 대응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가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도 대응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 외자/이체자의 문제는 표시만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낭독 및 정보검색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화된 다양한 출판물 데

이터가 낭독 및 정보검색의 서비스대상으로서도 동일하게 다뤄지는 상태가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식별번호 매트릭스를 축으로 한 이용환경에서 취급하는 데이터 가운데, 특히 국제표준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문자(외자)를 도형으로 취급하기 위한 데이터의 공통사양의 검토가 필요함.

○ 서적 등 디지털화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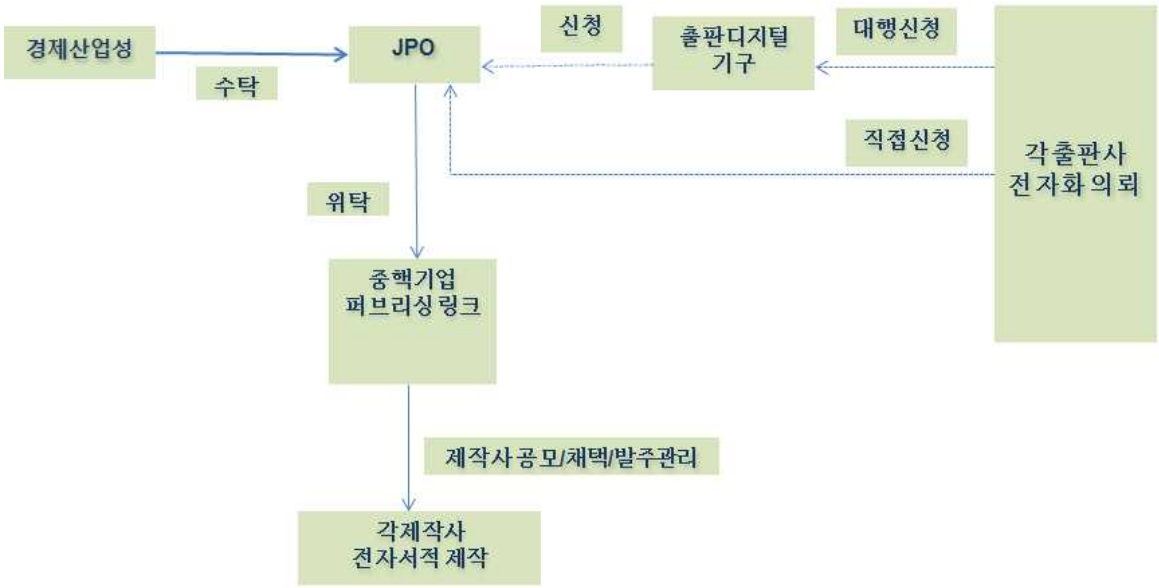
- 전술한 간담회 보고서의 제언에 따라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사업환경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실시를 제안.
-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출판물의 특성에 따른 계약의 원활화
- 파일 포맷의 출판사/인쇄사 등에의 보급촉진
- 외자/이체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서점을 통한 전자출판가 종이의 출판물 시너지 효과의 발휘

3. 사례 : 콘텐츠 긴급전자화 사업

○ 콘텐츠 긴급전자화 사업 : 킨디지.jp

- 킨디지란 경제산업성의 <콘텐츠 긴급전자화사업>의 약칭임. 이 사업은 일본내 출판물을 2012년 1년간 6만권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일본출판 인프라센터(JPO)가 위탁을 받아, (주) 퍼블리싱 전자화를 진행할 사업자(제작회사)를 전담할 핵심기업으로서 (주)퍼블리싱이 채택됨.

▌그림 6▐ 킨디지 사업자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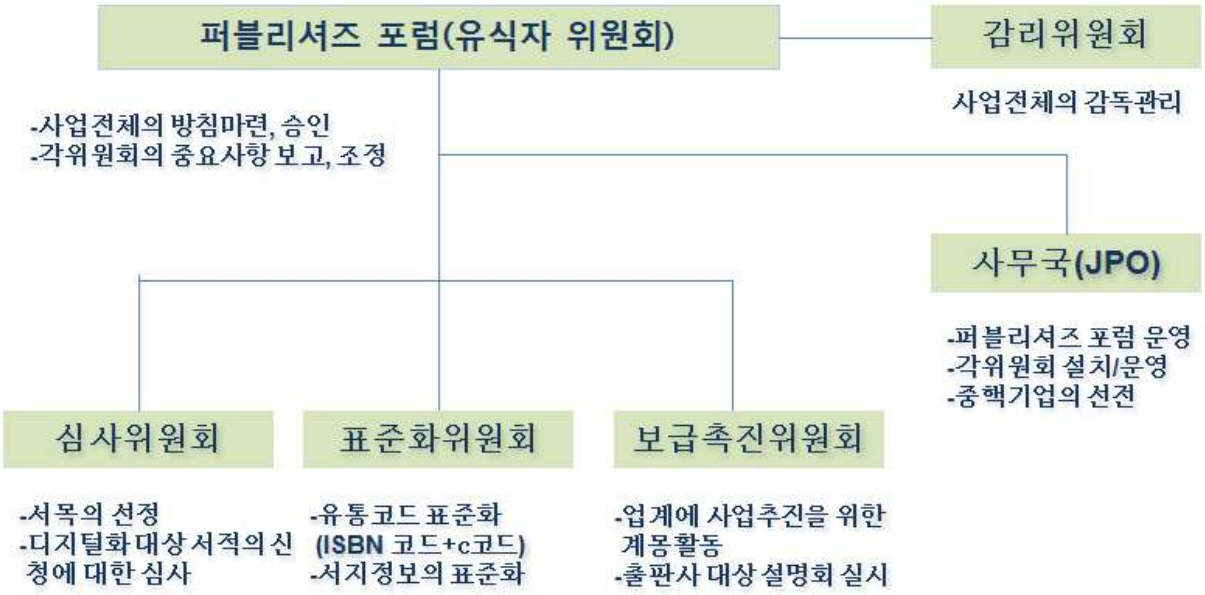
- 지원금액은 전자화 비용금액의 50% (조건에 따라 2/3까지 가능)
 - 대행출판사인 (주)출판디지털기구(퍼블리싱)과 계약하면 초기비용이 거의
 제로(비용을 출판디지털기구가 대신 지불).
 - 지원예산 규모는 사업총액의 50%인 약10억 엔으로 사업총액은 약20억 엔
 임. 전자화 서적의 아이템 수는 약 6만타이틀임.
 - 전자화할 서적은 출판사 심사를 거친 출판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타이틀선정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선정.
 - 지원 대상 출판사는 일본 기업이고 중소기업일 것, 퍼블리셔즈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출판단체의 회원, (사) 일본출판중개협회에 가맹 회원과 거래가 있을 것, 또는 (주) 지방 · 소출판 유통센터와 거래가 있을 것, SBN출판사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 국제본부운영자금 (구 : 국제본부 분담금) 을 지급하고 있을 것.
 · 서적JAN코드를 사용중인 출판사는 서적JAN코드 신청 또는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을 것.
 - 일본출판인프라센터 상품기본정보 센터로 과금승낙서를 제출할 것.

- 대상서적의 범위는 ISBN코드가 부여된 것 (잡지는 대상 외), 출판사가 대상 서적의 디지털화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판사가 책임을 짐)
- 도서 기증에 적합한 서적일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신청/제작/전송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출판 디지털 기구를 통해 대행 신청을 했을 경우, 출판사가 저본(底本)을 준비하기만 하면, 전자 서적의 제작으로부터 전송(전자 서적 서점 사이트에서의 판매)까지, 모든 것을 출판 디지털 기구가 대행함. (교정 확인은 출판사가 진행)
- 출판 디지털 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송을 희망하는 주된 전자 서점에 전자 서적 데이터를 도매할 예정이지만, 출판사의 요청에 따른 전송처에만 전송하는 것도 가능. 또, 전자 서적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이 판매 초기부터 출판사에 지불됨(*일정기간, 출판 디지털 기구만이 전달 · 판매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출판 디지털 기구가 대행할 경우, 전자 서적 제작비로부터 보조금을 뺀 나머지를 출판 디지털 기구가 대금 지불하므로, 출판사의 초기 비용은“거의 0엔“이 됨(*보조금의 소비세는 출판사가 부담). 그 대신에 전자 서적의 전송 · 판매 시에, 일정한 기간, 일정한 비율로 매출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게다가 중간 작업 파일을 출판 디지털 기구가 아카이브(archive)로 보존해, 앞으로 새로운 전자 서적 포맷이 발매될 경우, 이에 맞춰 변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술 혁신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도록, 범용성이 높은 사양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백업 보존함.
- 출판 디지털 기구를 통하지 않고, 출판사가 JPO에 직접 전자화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전자화 비용의 절반을 출판사가 선납으로 부담해야함. 또, 제작한 전자 서적의 전달처(전자 서점)등에 대해서도, 출판사가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해야함. JPO의 업무는 제작한 전자 서적 파일과 중간 작업 파일을 출판사에 납품한 시점에서 완료가 됨.
- 킨디지 사업의 제작 회사는 공모를 통해 테스트 작업의 품질이나 견적을 정밀조사 하여, 동북지역에서의 작업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 채용을 결정함. 어느 회사에 어느 출판사의 작업을 의뢰할지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싱 링크가 지정함.

- 그러나, 출판사로부터의 제작회사 지정에도 일부 대응하고 있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출판물의 DTP 데이터를 제작 ·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킨디지 신청 시스템과 서적 데이터와 관련 각 출판사가 출판 디지털 기구 혹은 JPO와 계약 체결을 한 뒤에는, 개별 타이틀 신청, 전자화 크레디트(서적 정보)의 등록 확인, 저본(底本)의 송부, 교정, 전송(납품)의 순서로 진행됨.
- 킨디지로 제작한 전자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두 전송 · 판매하는 것이 전제임. 판매 예정 없이 전자화만을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함.
- 출판 디지털 기구가 대행하는 경우는 요율이나 전송방법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요 전자 서점에 전자 서적 데이터를 도매함. 요율 등의 교섭은 모두 기구가 실시함.
- 직접 신청의 경우는 각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전자 서점과 요율이나 판매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해야 함.
- JPO에의 직접 신청 했을 경우와 출판 디지털 기구에의 대행 신청 했을 경우, 출판사의 부담은 대행신청이 훨씬 저렴하게 가능.
- JPO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7▐ 킨디지 추진체제와 회의별 역할



- JPO 각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퍼블리셔스 · 포럼(유식자 위원회)는 사업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①사업 전체의 방침의 책정 · 승인 ②각 위원회의 인선 및 중요 사항의 보고 · 조정 ③사업 전체의 전자화 작업 및 서목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 등을 실시함.
- 감리 위원회는 전자화 작업을 일괄해 외주한 핵심 기업에 대한 사업의 감사사업 전체의 활동 상황을 파악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 · 관리
- 심사 위원회는 서적 전자화 신청 출판사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전자화 대상 서적 및 동북지방 관련 서적의 선정 기준 · 정의를 책정해, 신청에 대한 심사 업무를 실시함.
- 표준화 위원회는 서적의 유통 코드 및 정보의 표준화를 도모하여, 본 사업으로 전자화하는 서적의 운용 · 관리에 제공함. 아울러, 전자화 작업의 표준 사양의 책정 등을 실시함.
- 보급 촉진 위원회는 본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해 · 출판사의 협력을 얻기 위한 설명회 등 계몽 활동을 전개함.